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복지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건강증진과장)
- 발의일자: 2024. 5. 30.(목)
- 회부일자: 2024. 5. 30.(목)
- 검토기간: 2024. 5. 30.(목) ~ 6. 5.(수)

2. 개정이유

-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임신 및 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대 변경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나. 지원기준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다. 지원대상 조정(안 제10조)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시책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 및 금액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기부행위를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 지원금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원 금액의 정도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부담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¹⁾,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200만원
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안 제4조제2항 중 “구체적 지급기준·금액·지급방법은”을 “구체적 지급방법·금액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를 현행 제10조 한다.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2020추5138 판결)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p> <p>1. 셋째 자녀: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p> <p>2. 넷째 자녀: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p> <p>3.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p> <p>② 제3조제2항의 경우 2년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부터 1년 후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p>	<p>제4조(지원기준) ① 출생아의 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지급방법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p>	<p>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둘째 자녀: 50만원</p> <p>2. 셋째 자녀: 100만원</p> <p>3. 넷째 자녀: 200만원</p> <p>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p> <p>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0조(지원대상의 조정) --- ----- ----- ----- ----- 지원대상----- -----.</p>	<p><현행안></p>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